

2026
Vol. 1
통권 제3호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6
Vol. 1



CONTENTS

- 01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과제
- 관리체계과 실행력의 재정립 - | 지 남 석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원
- 02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진화:
다층형 DRT 모델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과제 | 안 용 준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원
- 03 세종시 생활인구 진단과 향후과제 | 서 환 석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지 남 석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원 |

I. 수립 중심 계획체계의 한계

● 계획과 실행의 간극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선언적 문서에 머무르는 한계가 반복되어 왔음

● 관리체계 전환의 필요성

- 최근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위기, 광역생활권 확대 등 도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문제는 계획의 내용 자체보다, 정기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 도시기본계획은 내용 중심의 논의를 넘어,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음

- 그 결과 모니터링은 제도적 선언에 그치거나, 일회성 점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모니터링 제도화 및 실제 도입 사례 분석 필요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실제 도입한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두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단순한 장기 비전 문서가 아닌, 지속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전략계획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제공함

II. 서울과 부산의 운영방식 비교

● 운영 주체와 방식의 차이

- 서울특별시는 2015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외부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전담 수행하는 협업형 체계를 구축함
- 매년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계획의 이행 상황과 도시 변화 추이를 점검하며, 지표의 절대값보다는 증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경향 분석에 주력하고 있음

II. 계획을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흐름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모니터링과 집행 상황 점검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이후 방치되는 장기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환류를 통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제도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성

- 지침은 도시기본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행정 운영의 기준 계획으로 다시 위치시키려는 시도이자, 계획-이행-점검-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접근이라 볼 수 있음

● 모니터링 체계의 안정적 작동 제한

- 다만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는 제한적임
- 다수의 광역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문서상에서 관리와 환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나 정기 보고 체계, 상시적인 지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표 1] 서울시와 부산시의 모니터링 운영방식 비교

구 분	서 울	부 산
시행 주체	· 외부 연구기관(서울연구원)	· 행정조직 내부(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방식	· 연구기관-시청 협업	·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
운영 주기	·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	· 2년 주기(격년제로 운영)
지표 운영	· 지표 수치의 증감 중심으로 진단	· 지표 전수조사 시행 · 목표 달성률 중심으로 비교
장 점	· 중립성, 연속성, 전문성 확보	· 정책과의 밀착성, 비교적 정밀한 분석 가능
단점(한계점)	· 부서 인식과 협조, 내부 활용도 미흡	· 인력과 예산 부담 · 환류체계 및 내부 활용도 미흡

- 이러한 방식은 포괄적인 범위의 다수 지표를 다루는 기본계획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운영 전략으로 평가됨
- 외부 연구기관 수행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 내부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 조정이나 부서별 사업 기획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다면 활용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이 글은 2025년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종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운영전략〉의 결과에 기반함

- 부산광역시시는 시청 도시공간계획과 산하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이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조직 전담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격년제(2년 주기)로 운영하며, 계획 지표를 전수 조사하여 목표 달성률을 비교적 정밀하게 진단함으로써 계획 관리와 정책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

- 서울과 부산은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부서 간 인식과 협조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냄
- 도시기본계획이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 특정 부서의 업무로 인식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료 제공과 정책 연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모니터링 결과가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내부 참고자료에 머무르는 경향도 확인됨
- 이는 모니터링이 실질적 관리 도구로 기능하지 못한 채 '점검을 위한 점검'에 머물 위험이 있음을 보여줌
- 결국 모니터링의 실효성은 지표의 정교함보다 운영 주체의 적성, 조직 내 인식 수준, 그리고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환류 구조의 유무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함

- 둘째, 세종시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성장 도시임. 성장 도시에서는 장기계획과 실제 개발 속도 간의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획의 적합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셋째,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함께 '정책 실험 도시'로서의 성격도 가짐. 이러한 도시일수록 정책 실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고, 이를 계획 체계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세종시 모니터링 체계 설계 방향

- 세종시가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도입한다면, <표 2>의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음
- 전체 3단계로, 각각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 단계로 구분함

[표 2] 세종시의 모니터링 도입 단계(예)

1단계 (도입기)	• 격년제 운영 • 핵심 성과지표 15~20개 수준으로 경량화 • 기존 통계 기반 활용 중심
2단계 (안정기)	• 전담 조직 또는 연구기관 협업 모델 도입 • 부서별 지표 관리 책임 명확화 • 결과 보고서 정례화
3단계 (고도화 단계)	• 모니터링 결과의 시민 공개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의무 반영 • 성과 기반 정책 조정 체계 구축

-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도 도입 자체가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를 도시정책 조정 과정에 명문화하는 것임
- 모니터링이 단순한 진단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예산 편성, 부문별 계획 수정, 전략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짐

● 도시기본계획의 전환: 수립에서 운영으로

-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중심 행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운영 중심 행정'의 기준이자 전략계획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계획은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전략 체계라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주체와 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사후 평가가 아니라, 도시 관리의 핵심 기술이다. 정기적 진단-환류-조정의 구조가 작동할 때, 장기계획은 비로소 전략적 문서로 기능함
- 서울과 부산의 사례는 완성된 모델은 아니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계획을 관리하는 도시는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에 비해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안정적으로 진화함
-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수립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일 수 있음

IV. 세종시에 주는 정책적 함의

-계획을 관리하는 도시로의 전환-

-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중추기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공간 구조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음
- 국가상징구역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6생활권 이후의 완성 단계 진입 등은 단순한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해당함
-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은 더 이상 장기 비전 문서에 머물러서는 안 됨
- 도시 여건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계획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전략 체계로 운영되어야 함
- 특히 세종시는 빠르게 변동해 온 도시로서, 계획 수립 이후의 관리 체계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큼

● 왜 세종시에 모니터링이 중요한가

- 첫째,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시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등 국가 기능의 이전은 도시 구조와 토지이용, 교통 수요, 공공시설 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변화는 20년 단위 계획의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관리 장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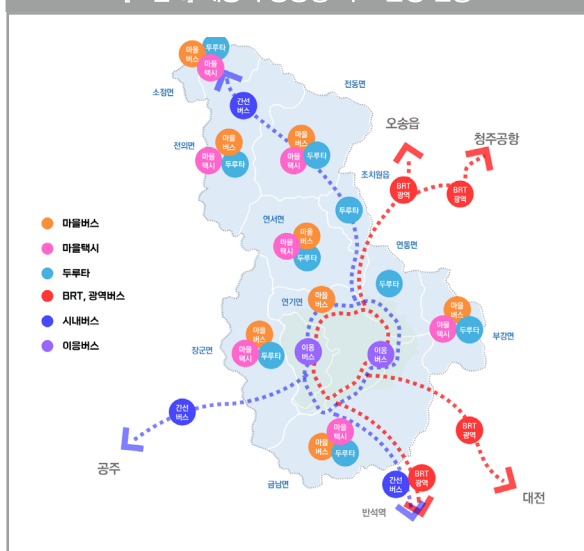


I. 정책 배경

: 도시 구조 변화와 교통 공급방식의 전환

- 세종시는 계획도시 기반의 신도심과 기존 읍·면 지역이 공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님
- 생활권 단위의 고밀 주거지와 농촌형 저밀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구조는 단일 노선형 버스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움
- 이에 세종시는 신도심 내부의 미시적 이동 보완과 읍·면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음
- 현재 세종시는 도심형 DRT '이음버스', 읍면형 DRT '두루타', 생활거점형 '마을택시'를 병행하는 다층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 체계는 단일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공간 유형별 역할을 분화한 구조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차별성이 있음

[그림 1] 세종시 공공형 버스 운영 현황



[그림 2]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위부터 이음버스, 두루타, 마을택시)



II. 운영 규모와 구조

: 확대된 이용, 높은 공공재원 투입

● 2024년 기준 연간 이용 규모

- 이음버스: 516,196명
- 두루타: 153,996명
- 마을택시: 39,296명

● 이음버스, 두루타, 마을택시 구조

- 이음버스는 도심 생활권 내부의 세밀한 이동을 담당하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주거단지·학교·생활편의시설 간 이동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III. 데이터로 본 이용 특성과 구조적 한계

● 운영 데이터 분석 결과

- 도심·읍면을 불문하고 출근·등교 시간대(대체로 7~9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 일부 권역에서는 평균 대기시간이 20분을 상회하는 구간도 존재함

1) 이 글은 2025년 세종연구원 정책과제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진화: 다층형 DRT 모델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과제

생활권별 특성 뚜렷

- 1·2생활권: 출퇴근 시간 수요 집중
- 3·4생활권: 주거단지-터미널·상업지역 이동 집중
- 6생활권: 학교 및 주거지 중심 통행 패턴
- 이는 이음버스가 생활권 내부의 미시적 접근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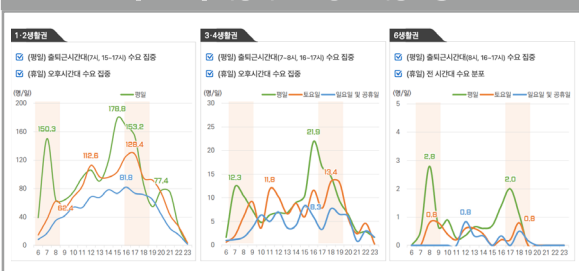
이용자 특성 분석

- 여성 이용 비율이 높고, 주요 이용 연령층은 10~40대로 나타남
- 평일 오전 시간대와 주말 오후 시간대 수요가 높은 점은 통학·통근 중심의 생활밀착형 이동 특성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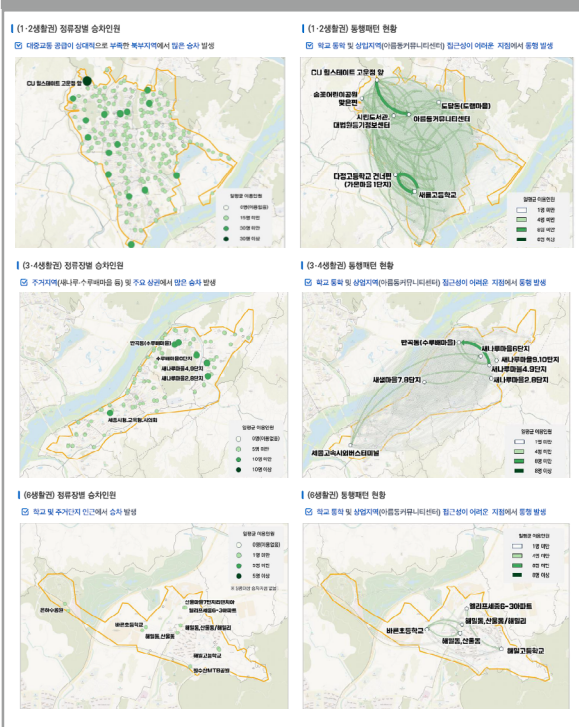
구조적 한계

- 그러나 시간대 집중 구조는 배차 효율성과 대기시간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야기함
- 공급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시간대·권역 기반의 정교한 운영 전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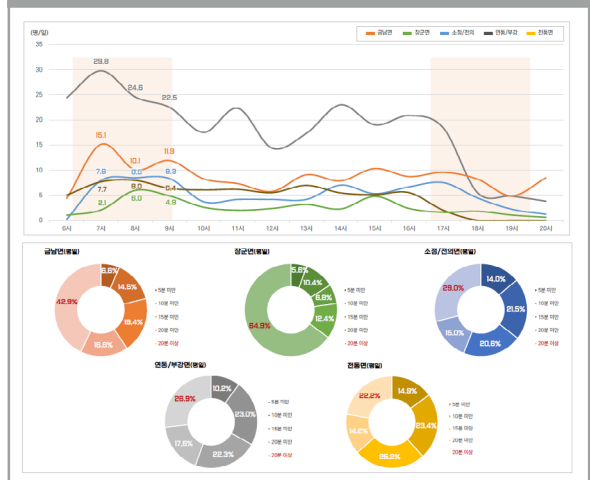
[그림 3] 이음버스 일평균 이용현황



[그림 4] 이음버스 생활권별 승차인원 및 통행패턴



[그림 5] 두루타 시간대별 이용인원 및 권역별 평균 대기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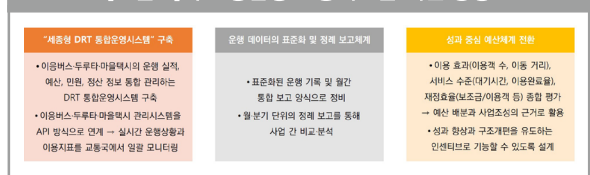
IV. 제도적·운영상 과제: 통합과 조정의 단계

-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영역 중복, 대기시간 지연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단순 증차는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노선 합리화 및 배차 효율성 제고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향후 과제 제시

- 호출-결제-정산 통합체계 완성
- 피크시간 '반고정'·비첨두 '호출형' 혼합모형 표준화
- 광역 연계형 DRT 실증 추진
- 성과연동형 운영관리체계 도입
- 또한 디지털 접근성 격차, 중복공급 및 재정누수 위험, 데이터 품질 관리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그림 6]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개선 방향



V. 정책적 함의: 확대에서 정교화로

- 세종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도심형-읍면형-생활형 수단을 계층적으로 배치하여 교통복지와 운영 효율성 간 균형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됨

향후 정책 방향

- 첫째, 권역·시간대 기반 공급조정의 계량화
- 둘째, 패스체계와 DRT의 통합 관리
- 셋째,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
- DRT는 “많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임
- 세종시 DRT의 다음 단계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통합 관리와 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에 있음



I. 논의 배경

● 인구감소사회 진입

- 국내 인구는 2020년 자연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였음
- 국내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등은 인구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 위기에서 지방소멸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을 넘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 세종시는 도시와 읍면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생활인구 정책을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제고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생활인구 개념 및 정책동향 검토

● 생활인구 개념

-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3. 1. 1. 시행)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둔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주기로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포괄함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체류·방문인구로 구분하며, 체류·방문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의미함

● 국내 생활인구 정책검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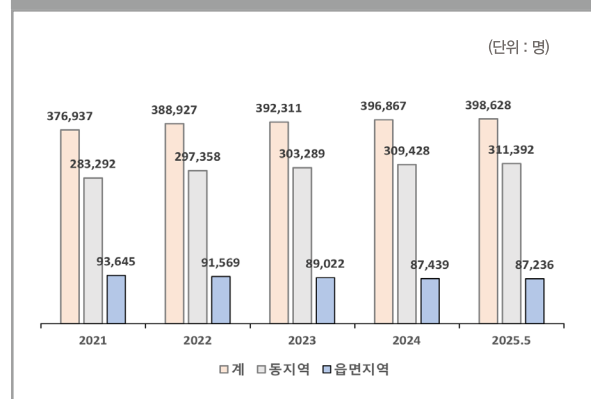
- 국가 차원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 통계 체계 마련, 중앙정부 부처별 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말·계절 단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체험·농촌관광,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 유흥시설 활용 사업에 생활인구 분석을 접목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행사 시기 및 규모를 조정 중임
- 국토교통부는 생활권 분석을 기반으로 광역 교통망·대중교통 노선 재편에 반영 중임
- 최근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대응, 농촌활성화, 관광정책, 생활권 정책 등과 결합되며 지역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방문객 통계를 넘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를 포착하는 정책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III. 세종시 인구 및 농촌자원 검토

● 인구현황

- 세종시 총인구는 2025년 5월 말 기준 398,628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392,111명, 외국인이 6,417명으로 나타남
- 동지역은 311,392명으로 세종시 인구의 78.1%를 차지하며, 읍면지역 인구는 87,236명으로 21.9%를 차지함
- 세종시 인구 순유입 추이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순유입 인구 중 충청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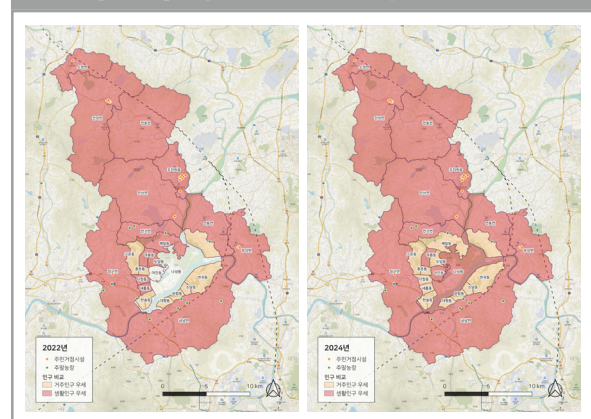
[그림 1] 세종시 인구변동 추이



●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현황

- 세종시 생활인구는 고운동, 반곡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행정동에서 생활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임
- 읍면지역은 거주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우세하였음
- 세종시 유동인구는 읍면지역 중 조치원읍, 연서면, 부강면을 제외하고는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며, 유동인구는 특정 시간·장소에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보행량' 중심의 개념임

[그림 2] 세종시 거주인구 대비 생활인구 변화



● 농촌자원 검토

- 자연적 자원은 전월산·원수산·운주산 등 산지자원과 금강·고북저수지·국교천 등 수변자원이 강점임
- 문화적 자원은 연기향교, 연동 향교서원, 비암사, 영평사 등 역사·종교자원과 장육진 생가, 황토박물관, 충남산림박물관, 흥판서택 등이 분포
- 사회적 자원은 세종농촌관광 '행복도시락', 농촌체험 프로그램, 주말농장·체험학습마을 등 참여형 기반이 마련돼 있음
- 시사점으로는 세종시는 도시 수요와 농촌자원을 가까운 거리에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생활인구 정책의 실험과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님

IV. 추진전략 및 향후과제

● 기존사업과의 연계방안

- 체류형을 넘어 정착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 추진을 위해 기존 농촌체험·마을관광 프로그램(주말농장, 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한 달 살기', '워킹홀리데이' 같은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함
- 새로운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위해 농촌 공동가공센터, 빈집 리모델링 사업, 농촌관광 거점 등을 생활인구 유입형 프로그램의 거점 공간으로 재할용되어야 함
- 대상 다변화로서 기존 농촌활성화가 주로 농가 소득 증대·관광객 유치 중심이었다면, 생활인구 정책은 청소년·청년·가족·은퇴세대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자로 설정 필요

● 추진방향

- 농촌 체류 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단기 체함에 머물던 농촌관광이, 생활인구 정책을 만나면서 장기 체류형·생활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함
- 인구소멸 대응으로서 농촌활성화 사업은 '소득·관광' 중심이라면 생활인구 정책은 '사람 유입·정착' 중심으로 서로 결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 활력을 동시 달성 필요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촌활성화에서 축적된 인프라와 경험(체험농장, 치유농업, 로컬푸드)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 사업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함
- 기존 농촌활성화 사업이 '하드웨어(공간, 시설)'를 구축했다면, 생활인구 정책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람)'를 채워 넣는 성격이 되어야 하며, 두 축을 결합하여 세종시 농촌은 관광·체험형 공간을 넘어 살아보고, 일하고, 정착하는 공간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정책 설계 시 기존 농촌 활성화 예산·거점과 생활인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협업 구조(도농상생국-문화체육관광국-교육청-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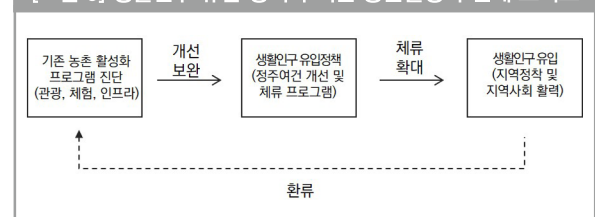
● 거버넌스 구축

- 다부처 협력 체계로서 시청(도시·농업·문화·복지 부서)+교육청+국토부·농식품부 등 중앙정부 부처 협력이 필요하며, 청소년(교육), 청년(창업·문화), 직장인·가족(주거·복지), 은퇴세대(치유·정착) 등 대상별 정책을 통합 조율하여야 함
- 지역사회·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로서 마을협동조합, 농민단체, 청년 로컬벤처 조직을 거버넌스 내 주요 축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 필요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공공에서는 인프라·제도 지원(빈집 리모델링, 보조금, 규제완화)하여야 하며, 민간에서는 콘텐츠 운영, 창업 투자, 문화·관광 상품 기획(예: 로컬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농촌체험마을 기업화)
- 연구·교육·컨설팅 네트워크의 협력체계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는 정책 평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문가·NGO는 현장 컨설팅, 커뮤니티 매니저 양성이 필요

● 향후과제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서 생활인구 개념을 법·제도에 반영(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 연계)하고, 체류형·단기거주자의 주민등록, 건강보험, 세금 등 제도적 지위 보완 필요
- 지속가능 재원 확보로서 단기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하며, 지방재정, 중앙정부 공모, 민간 투자, 지역펀드의 연계 방안 필요
- 성과 관리 및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단순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실제 정착·재방문율·소득 창출 효과를 측정하고, 생활인구 빅데이터(체류인구·유동인구 통계)와 정책효과를 연계시켜야 함
- 지역별 맞춤형 모델 개발을 위해 관광중심형 권역, 치유·웰빙 권역, 창작·청년 권역 등 생활인구 클러스터를 특화시켜야 함
- 세종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을 살려 도시-농촌 복합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 공동체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유입 인구와 기존 주민 간 갈등 관리가 필요하며 문화·세대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그림 3] 생활인구 유입 정책과 기존 농촌활성화 연계 모식도





<https://sri.re.kr>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세종연구원]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SM메디컬센터 5,6층)

Tel. (044) 550-3500 Fax. (044) 555-3599

발행인. 권영걸 편집인. 이인희 등록번호. 세종, 바00043